



97년도 에이즈 예방사업 예산과 향후정책 방향

황보 승 남 / 의계신문 편집국장

전년도 예산수준에 불과

올해 보건복지부의 성병 및 에이즈관리 예산만을 놓고 본다면 지난해 12월 복지부주관으로 개최된 「AIDS 전망과 홍보정책」연찬회에서 밝힌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국민들의 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제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부의 업무」라는 인사말은 단지 화려한 修辭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가운데 성병 및 에이즈관리 예산총액이 전년도 예산규모와 같은 수준(96년對此 고작 1.4%증가)인 19억8천 만원에 불과하다는 것과 더욱이나 매년 환자를 포함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사실상 홍보전략의 후퇴라고 판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부가 기회있을때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예방홍보에 주력하면서 감염자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감염위험계층의 정기적인 항체검사와 감염자의 보건교

육에 노력해 왔다」는 것이 결국은 아직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복지부요구 대부분 삭감

이번 예산에서는 당초 복지부가 증액을 요구했던 사업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따라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혔던 결핵, 성병, 산모검진시

검진을 유도토록하는 「Surveillance system」의 개발이나 Antigen 검사 도입, 그리고 도시지역 소규모 감염자 쉼터(shelter)의 개발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올 예산에서는 에이즈검진사업(총1백40만건)에 10억6천4백만원, 감염자 진료(40명)에 4천8백만원, 치료약품구입, (AZT)에 2억1천6백만원, 대한에이즈예방협회를 비롯한 민간홍보사업지원에 1억6천만원 그리고 기타 홍보사업 등에 4억9천2백만원이 배정됐다.

익명검사제도 확대키로

복지부는 이러한 예산 규모에 맞춰 향후 정책방향을 예년과 같이 위험집단 중심의 교육홍보 및 대중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민간기구에 대한 홍보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감염자 발견사업은 강제 검진대상자는 현수준으로 유지하되 감염 우려자의 병·의원 검사 및, 보건소 확대등 익명검사제를 확대하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제기되었던 감염사실 통보를 폐지하여 감염우려자의 헌혈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같은 익명검사제가 확대되면 감염자의 자발적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관리의 자발성에 역점을 두고 AZT등 면역억제 사업의 확대로 감염자들의 실질적 도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환자관리를 위해선 Reporting 시스템정비, 환자 및 감염자 치료비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원의 AIDS연구지원과 보건요원의 교육훈련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사실 에이즈관리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정부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병 및
AIDS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을
민간참여를
확대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민간주도사업 활성화 필요

AIDS관리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난망하다는 이러한 현실적 고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효율적인 에이즈관리를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HIV감염 예방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사실 에이즈관리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정부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병 및 AIDS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을 민간참여를 확대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확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첫째, 정책 입안 단계에 참여하는 일이다.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와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에이즈대책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정부가 해야 하는 부분과 민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활동을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의 접근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이다. HIV 감염의 우려가 높지만 정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동성연애자, 비노출 접대부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민간 단체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들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된 경우에도 따돌림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감염자를 돌보는 일이다. 정부만의 힘으로 감염자들을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직접적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감염자들이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Shelter)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감염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첫 HIV감염자가 확인된지 10년이 넘었으며, HIV/AIDS는 이제는 외국에서 침투해오는 병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 HIV/AIDS확산의 제1주범은 감염자/환자를 사회의 음식로 숨도록 한 그릇된 인식과 차별이었다.

WHO의 구호가 「World without HIV/AIDS」에서 「World Living with HIV/AIDS」로 전환한 것은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HIV/AIDS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상, 하나의 희망

UNAIDS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하나의 세상, 하나의 희망」(One World, One Hope)이라는 표어를 제정하여 HIV 유행 확산저지와 감염자 돌봄을 위해서 지구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수가 늘어나면 여기에 걸맞는 에이즈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화려한 구호보다는 실제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당국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